

nabo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9월호 통권 제59호



CONTENTS

- I. 경제동향
- II.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 요인 분석
- III. 최근 경기확장기 분석과 특징
- IV. OECD국가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서비스업 특징

nabo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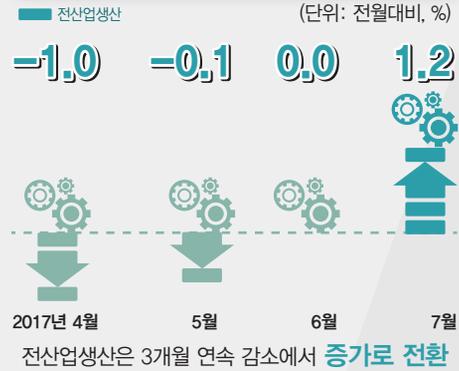
2017년 9월호 통권 제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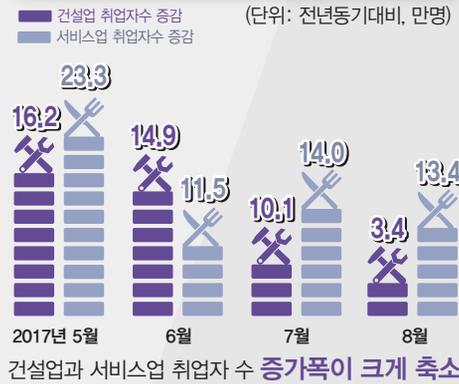
Contents

I. 경제동향	4
II.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 요인 분석	19
III. 최근 경기확장기 분석과 특징	29
IV. OECD국가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서비스업 특징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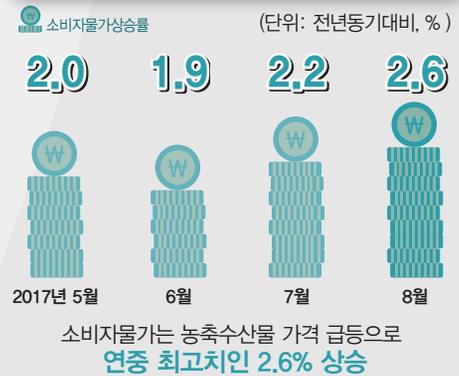
생 산



고 용



물 가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연락처
788-3775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이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미진한 모습

- ⊙ 전산업생산은 7월 중 자동차·전자부품을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며 4월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1.2%)로 전환
- ⊙ 그러나 고용여건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건설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악화되는 양상
 - 건설업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17.1/4)13.1 → (2/4)15.7 → (7월)10.1 → (8월)3.4
 - 서비스업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17.1/4)36.5 → (2/4)23.1 → (7월)14.0 → (8월)13.4
- ⊙ 또한 경기회복을 견인해온 설비·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이 둔화되면서 향후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우려가 증대
 -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대비, %): (17.1/4)-0.9 → (2/4)10.8 → (7월)-8.5
 -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 %): (17.1/4)3.6 → (2/4)17.2 → (7월)-30.8

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과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전월(2.2%)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근원물가 1.4% 상승)

- ⊙ 농축수산물가격은 여름 폭우·폭염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2.2% 상승(기여도 0.96%p)
- ⊙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한시적(7~9월)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전년 동월대비 8.0% 상승(기여도 0.29%p)

8월 중 원/달러 환율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높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으며,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상승세 흐름을 지속

- ⊙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31원으로 전월(1,133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월 중 높은 변동성을 시현
 - 상승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 고조로 1,144원(11일)으로 급등하고, 월말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가 높아지며 1,127원으로 하락
- ⊙ 국고채금리는 국내 국채발행 물량 증가와 ECB의 양적긴축 움직임 등으로 전월(1.74%)에 비해 4bp 상승한 1.78%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감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Q	4Q	1Q	2Q	6월	7월	8월
전산업생산	1.9	2.9	3.2 (1.3)	3.0 (0.9)	3.9 (1.3)	2.7 (-0.3)	1.7 (0.0)	2.2 (1.2)	-
광공업생산	-0.3	1.0	0.7 (1.4)	0.5 (0.1)	3.7 (1.6)	0.5 (-2.4)	-0.5 (-0.5)	0.1 (1.9)	-
서비스업생산	2.9	3.0	3.5 (1.1)	3.6 (1.0)	2.6 (0.9)	2.3 (0.6)	2.1 (0.6)	2.2 (0.6)	-
소매판매액	4.1	4.3	5.9 (2.0)	3.5 (-1.2)	2.5 (2.1)	1.7 (1.2)	1.1 (1.2)	3.5 (0.2)	-
설비투자지수	6.3	-1.3	0.6 (5.1)	-4.7 (-1.9)	18.1 (5.6)	17.7 (4.4)	18.5 (4.8)	25.0 (-5.1)	-
건설기성액(불변)	5.0	15.5	14.5 (4.2)	17.7 (4.1)	17.9 (5.9)	13.9 (-1.0)	8.7 (-0.4)	14.1 (3.6)	-
수출(통관)	-8.0	-5.9	-6.7	-5.0	14.7	16.7	13.5	19.5	17.4
수입(통관)	-16.9	-6.9	-10.1	-5.1	23.9	18.8	19.8	15.5	14.2
경상수지(억달러)	1,059	987	263	215	194	168	59.4	70.1	72.6
실업률	3.6	3.8	3.8	3.6	3.2	3.9	3.6	3.5	3.6
취업자수(천명)	337	289	289	318	302	367	375	313	21.2
소비자물가	0.7	1.0	0.9	0.7	1.5	1.9	1.9	2.2	2.6
원/달러환율	1,131	1,160	1,163	1,120	1,159	1,153	1,132	1,133	1,131
국고채금리(3년)	1.79	1.44	1.42	1.26	1.67	1.68	1.67	1.74	1.78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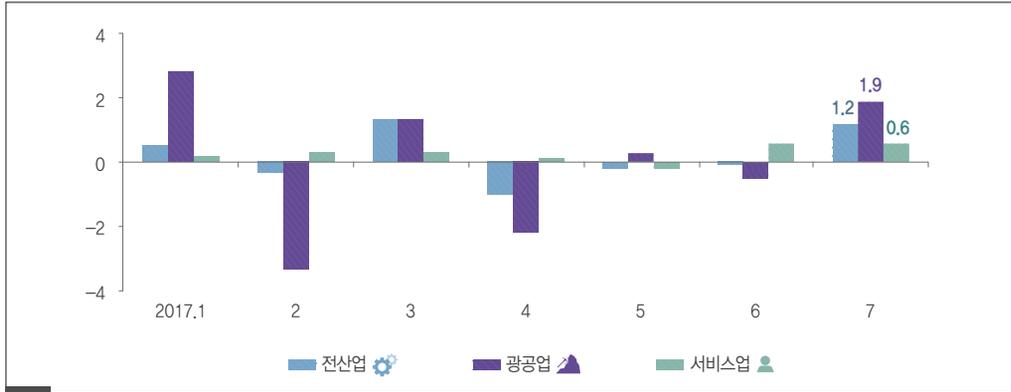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월대비 기준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7월 중 전산업생산 증가는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며 전월대비 1.2%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이후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로 전환
- 광공업생산은 특히 자동차(6.5%), 전자부품(9.6%) 등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전월대비 1.9%의 큰 폭 증가를 보임(전산업생산 기여도 0.6%p)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0%), 보건·사회복지(1.3%)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증가(전산업생산 기여도 0.33%p)
- 7월 중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에 비해 2.2%p 증가한 73.4%를 나타냄

[그림 1]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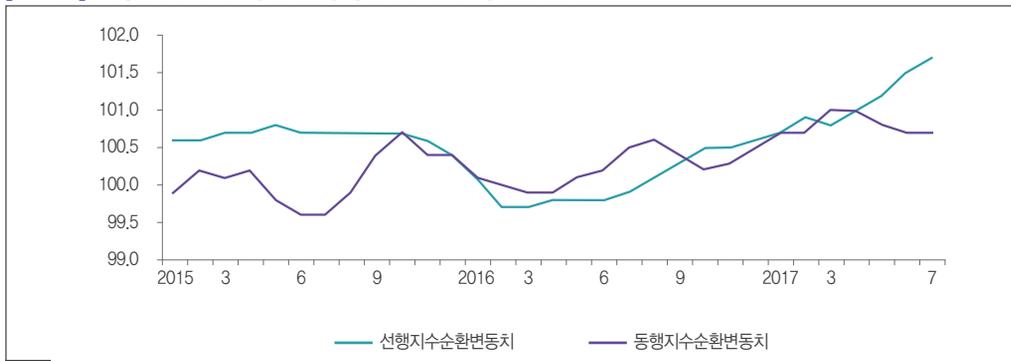
(단위: 전월대비, %)



자료: 통계청

- 7월 중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보합을 나타내는 등 최근 3개월 간 두 지표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
 -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심리(소비자심리지수)와 금융(코스피지수) 변수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p 상승한 101.7을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지속
 - 반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수준인 100.7을 나타내어 5월부터 하락하는 모습

[그림 2]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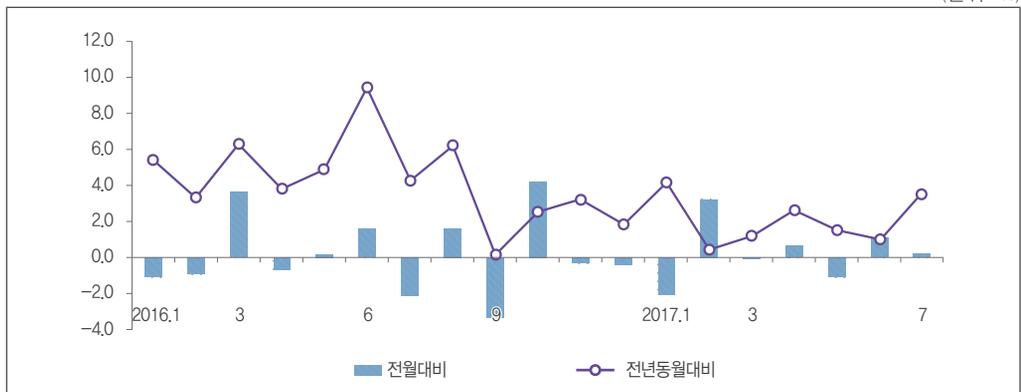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도 3.5% 증가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

- ◎ 7월 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판매가 늘어나며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5월)-1.1 → (6월)1.2 → (7월)0.2
 -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5월)1.4 → (6월)1.1 → (7월)3.5
- ◎ 7월 중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판매가 전월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 승용차 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5월)0.5 → (6월)3.7 → (7월)-10.1
 - 통신기기 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5월)8.6 → (6월)5.9 → (7월)8.3
- ◎ 8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북한리스크 등으로 전월(111.2)보다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는 109.9를 기록

[그림 3]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17년 2/4분기 국민계정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 ◎ 2017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0% 증가해 2015년 4/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 이른더위,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5월 황금연휴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등에 기인
- ◎ 전년동기대비로도 2.3% 증가하여 지난해말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 민간소비는 2016년 4/4분기 탄핵정국, 개별소비세 인하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침

- 그러나 수출회복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2017년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2.0%, 2/4분기 2.3%로 완만하게 증가

건설투자는 재건축 중심으로 주택착공이 증가하고, 전월 감소했던 토목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4개월 만에 감소세에서 반전

- ◎ 2017년 7월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이 전월대비 4.5% 증가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고 토목도 1.2% 증가하여 3.6% 증가
- ◎ 전년동월대비로도 둔화세에서 벗어나며 14.1% 증가
 - 건설기성(전월대비, %): ('17. 4월)-4.5 → (5월)-1.7 → (6월)-0.4 → (7월)3.6
 - 건설기성(전년동월대비, %): ('17. 4월)18.9 → (5월)14.9 → (6월)8.7 → (7월)14.1

[그림 4] 공종별 건설기성액 추이

(단위: %)



주: 선그래프는 전년동월비, 그 외는 전월비
자료: 통계청

- ◎ 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연말)를 앞두고 조합이 재건축을 서두르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6월 착공·분양 증가효과가 7월 기성액에 반영되어 전월대비 4.5% 증가
 - 건축(전월대비, %): ('17. 4월)0.2 → (5월)-3.3 → (6월)0.7 → (7월)4.5
 - 착공(만호): ('17. 4월)3.4 → (5월)3.5 → (6월)5.1 → (7월)4.0
 - 아파트분양(만호): ('17. 4월)1.4 → (5월)2.3 → (6월)5.2 → (7월)2.4
- ◎ 토목은 지난 2/4분기 중 전분기대비 8.0% 감소한 데 따른 반등으로 1.2%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8.1%로 5개월 연속 감소세
- ◎ 플랜트의 증가세가 빠르게 축소되고 일반토목(도로, 철도 등) 감소세로 인해 토목투자가 전년동월 대비 위축되고 있는 상황

- 토목(전월대비, %): ('17. 4월)-16.0 → (5월)3.0 → (6월)-3.4 → (7월)1.2
- 토목(전년동월대비, %): ('17. 4월)-5.3 → (5월)-2.9 → (6월)-10.3 → (7월)-8.1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17. 4월)16.4 → (5월)22.8 → (6월)13.5 → (7월)1.8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17. 4월)-2.8 → (5월)-3.2 → (6월)-10.1 → (7월)-5.4

◎ 강도 높은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토목투자를 이끌었던 플랜트도 2/4분기 들어 약세를 보여 향후 건설투자는 둔화될 전망

- 다만 초과이익환수세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2/4분기 아파트분양과 착공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용건축의 둔화세는 완만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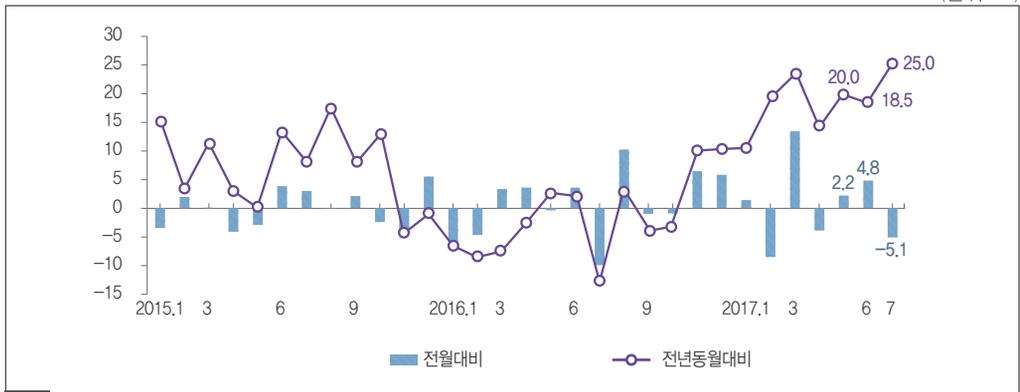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류 투자가 모두 줄며 전월에 비해 감소

◎ 7월 중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1%)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2.2%)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1% 감소

-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 %): ('17. 5월)2.2 → (6월)4.8 → (7월)-5.1
- 기계류(전월대비, %): ('17. 5월)10.6 → (6월)3.2 → (7월)-6.1
- 운송장비(전월대비, %): ('17. 5월)-17.5 → (6월)8.6 → (7월)-2.2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저효과로 9개월 연속 두 자릿 수의 높은 증가세 유지

[그림 5]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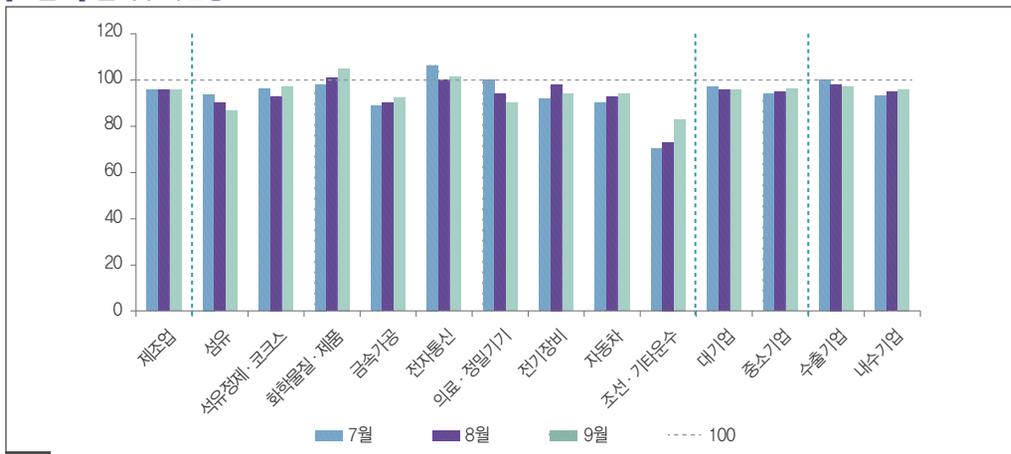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선행지표인 기계류내수출하와 국내기계수주도 민간부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모두 감소 전환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17. 5월)-0.5 → (6월)4.1 → (7월)-3.2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17. 5월)-13.5 → (6월)24.6 → (7월)-8.5

- ◎ 상반기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반도체부문의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을 중심으로 기계류수입액의 증가세도 큰 폭으로 둔화
 - 기계류수입액(전년동월대비, %): ('17. 6월)19.9 → (7월)31.1 → (8월)11.3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17. 6월)266.8 → (7월)134.4 → (8월)37.2
-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하락하고 설비투자전망BSI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위축되고 있어 하반기 투자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
 - 제조업설비투자 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은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p): ('17.1/4분기)2.3 → (2/4분기)-0.5 → (7월)-0.7
 -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BSI: ('17. 7월)100 → (8월)98 → (9월)97

[그림 6] 설비투자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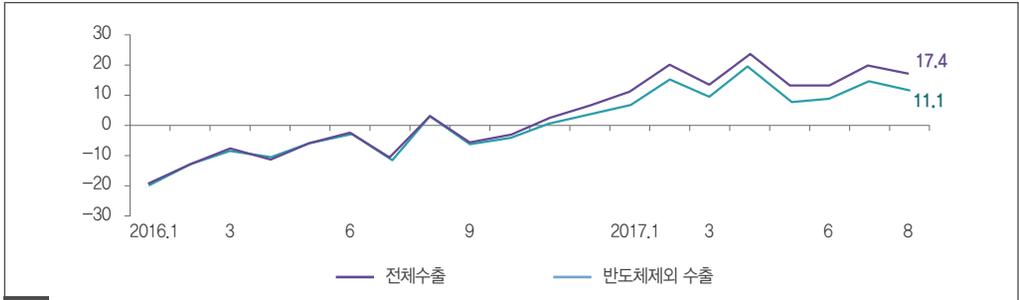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수출은 세계경기회복세로 대부분 국가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연중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 ◎ 8월 중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17.4%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각각 471.2억 달러, 19.6억 달러를 기록
 - 8월 수출은 금년 들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며,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1.1% 증가
 - 2017년 1~8월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
- ◎ 수출기업의 채산성과 보다 밀접한 원화표시 수출금액은 53.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7]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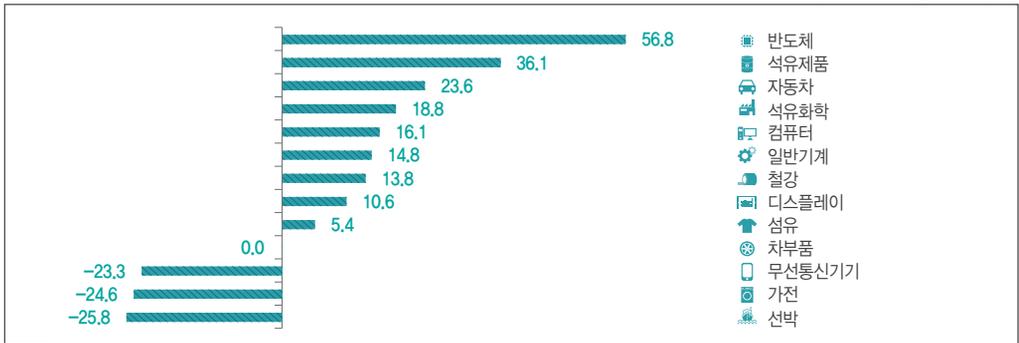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물량과 단가요인으로 살펴보면, 단가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월 감소했던 물량은 증가로 전환
 - 수출단가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7. 6월)11.4 → (7월)21.2 → (8월)8.5
 - 수출물량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7. 6월)2.0 → (7월)-1.3 → (8월)8.2
-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13대 주력품목 대부분이 증가
 -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가격 안정세 지속, 신형 스마트폰 출시대비 수요강세 지속 등으로 8월 수출이 월간 기준 최대 금액인 87.6억 달러(전년동월대비 56.8% 증가)를 기록
 - 석유제품은 유가상승과 세계경기회복세로 인한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6.1% 증가
 - 자동차는 지난해 파업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23.6% 증가
 - 8월 중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선박(-25.8%), 가전(-24.6%), 무선통신기기(-23.3%) 등으로 이들 품목들은 해외생산확대 및 최종재 판매 부진,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수주 감소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그림 8] 13대 주력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8월)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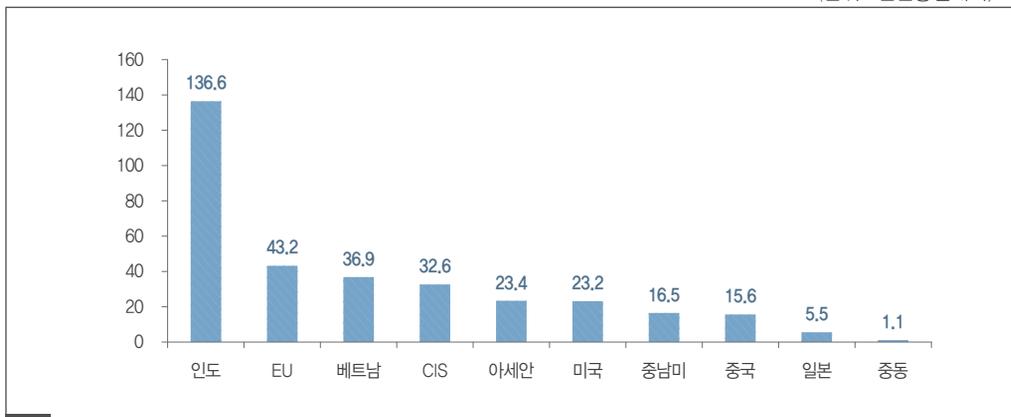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 지역별로는 대인도 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호조를 보임
 - 특히 인도 수출은 인도경제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실적인 20.5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36.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유럽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대EU수출이 43.2%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지역으로의 수출이 증대

[그림 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8월)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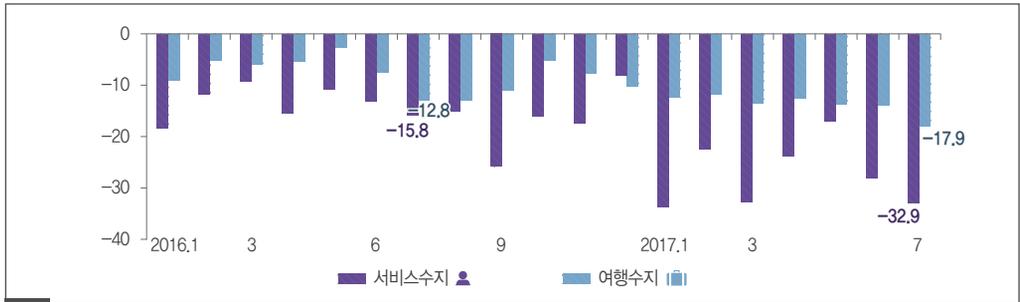
- ◎ 8월 중 수입은 소비재가 감소하였으나 1차산품, 중간재, 자본재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
 - 품목별로는 원유, 유연탄, 동광 등 1차산품이 전년동월대비 28.8% 증가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18.6%), 중간재(13.5%) 수입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 8월 중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6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2017년 1~8월 중 누적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월평균 78억 달러 수준을 보이며 623억 달러를 기록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추세가 이어졌으나 여행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로 전년동월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

- ◎ 7월 중 경상수지는 7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84.1억 달러) 보다 흑자규모가 축소
 - 상품수지는 107.1억 달러 흑자를 보여 전년동월(106.7억 달러)과 비슷한 규모를 나타냄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인 17.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32.9억 달러 적자를 보임
 - 금년 1~7월 중 누적 경상수지는 435.3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으로 전년동기(601억 달러) 보다 165.7억 달러 흑자폭이 축소

[그림 10]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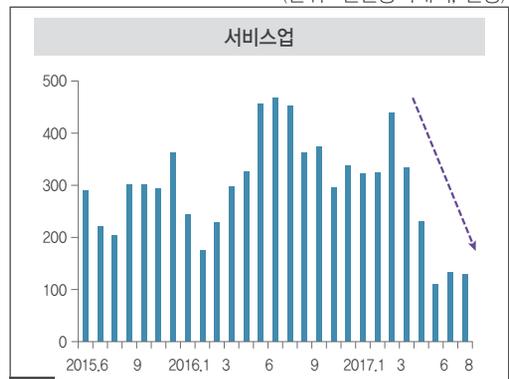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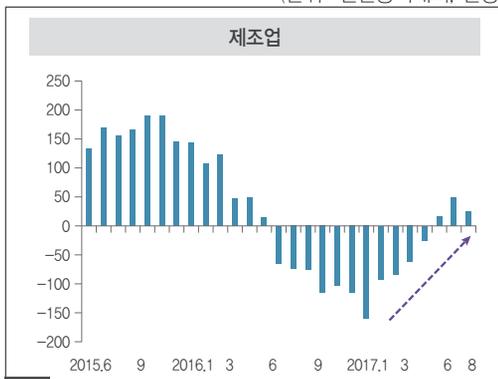
노동시장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

- 8월 중 취업자수는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서비스업에서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머물면서 전체적으로 21.2만명(0.8%) 증가에 그침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만명): 비농림어업 19.3(제조업 2.5, 건설업 3.4, 서비스업 12.9), 농림어업 1.9
 - 서비스업 고용은 숙박및음식점업(-4.0만,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4만, -3.1%), 금융및보험업(-1.9만, -2.4%)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공공행정(7.5만, 7.4%), 부동산업 및임대업(3.9만, 6.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8만, 2.5%) 등에서 증가
 - 제조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건설업은 기후적 요인과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10만명대 증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제조업의 고용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과의 사드갈등 장기화와 건설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고용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1]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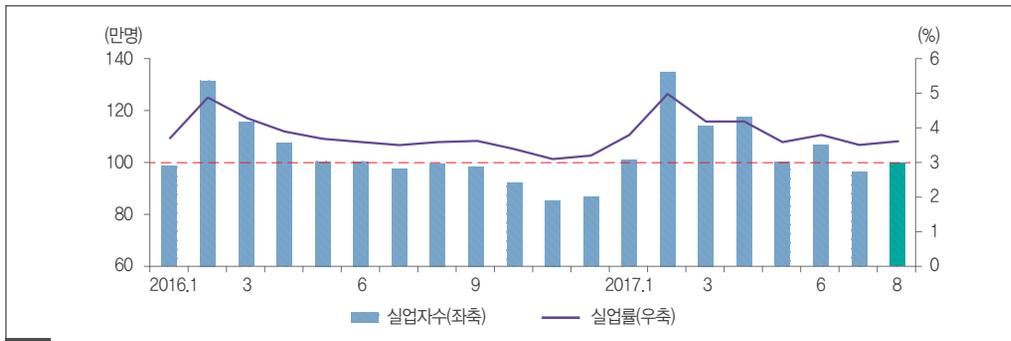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명)



자료: 통계청

-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6%(계절조정 3.8%)로 전년동월과 동일(계절 조정 전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은 61.1%(15~64세 OECD비교기준은 66.7%)로 전년동월대비 0.1%p(OECD비교기준 0.3%p) 상승
 - 실업률은 20~24세(-1.0%p), 60세이상(-0.1%p)에서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으나, 25~29세(0.6%p), 30대(0.1%p), 50대(0.1%p) 등에서 상승
 - 실업자수는 100.1만명을 기록해 다시 100만명대로 증가하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5.6만, 12.9%)과 중졸이하(0.6만, 5.2%)에서 증가
- ◎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도 확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6만명(3.5%)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6.7만명(-3.2%), 일용근로자는 3.6만명(-2.5%)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0.3만명(-0.1%),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폭이 확대되며 4.1만명(-3.4%) 각각 감소

[그림 12]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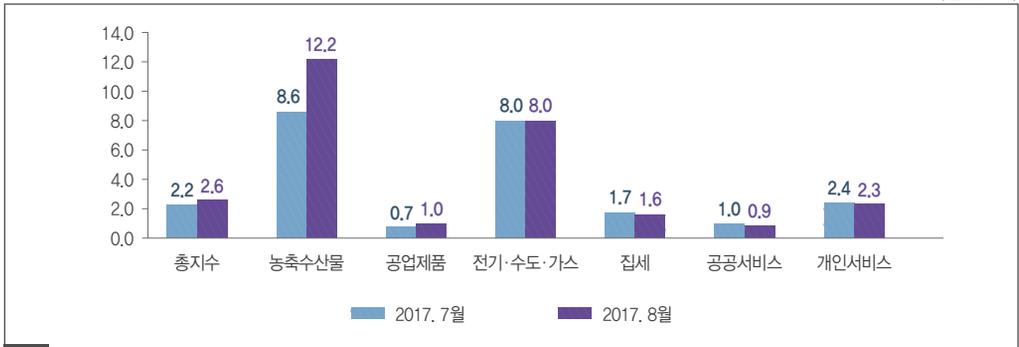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식품 및 전세 가격 상승 등에 의해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 8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를 기록하여 전월(2.2%)보다 0.4%p 상승
 - 상품 품목의 경우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여파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2.2% 상승하였으며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서비스 품목의 경우 전세가격이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였으며 휴가철 콘도이용료 및 국내단체여행비 등의 상승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품목성질별 기여도는 농축수산물(0.96%p), 개인서비스(0.75%p) 순으로 높음

[그림 13] 품목성질별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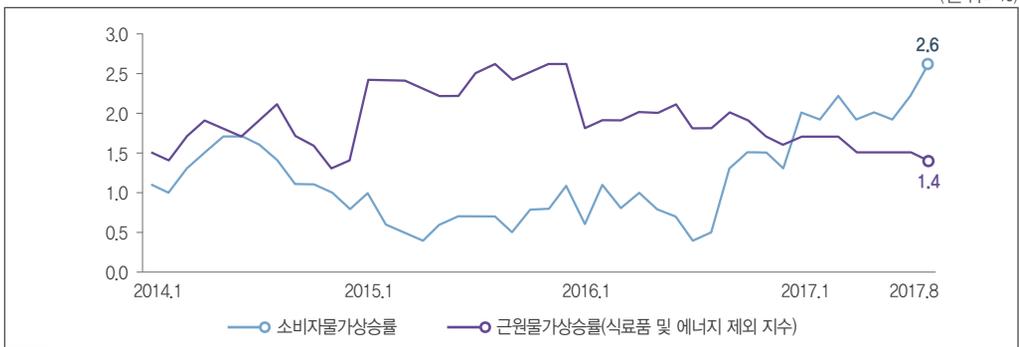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반영

- 다만,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올해 들어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향후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식품, 전월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자가주거비(주거목적의 소유주택에 대한 비용을 추정)를 포함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그림 14]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근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 8월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1.74%)에 비해 4bp 상승한 1.78%를 기록

- 유로존 경기회복으로 인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긴축(테이퍼링) 움직임과 국내 국채 발행량 증가 등 금리상승요인이 북한 리스크 등 금리하락요인과 맞물려 제한적인 범위에서 완만히 상승

◎ 8월 중 외국인 채권투자는 순투자에서 순매도로 전환

- 8월 중 외국인 채권투자는 1년 미만 단기 동안채 만기상환의 영향으로 약 2.2조원 순매도로 전환되었으며 외국인 채권보유액은 8월말 기준 총 104.4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6.3% 비중
- 8~9월 중 북한 리스크 확대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인 투자동향 변화에 유의할 필요

◎ 한편, 3년 만기 기준 회사채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차인 신용 스프레드는 보험세를 유지

- 고신용등급채권(AA-): (17. 6월)0.54%p → (7월)0.54%p → (8월)0.54%p
- 저신용등급채권(BBB-): (17. 6월)6.77%p → (7월)6.78%p → (8월)6.7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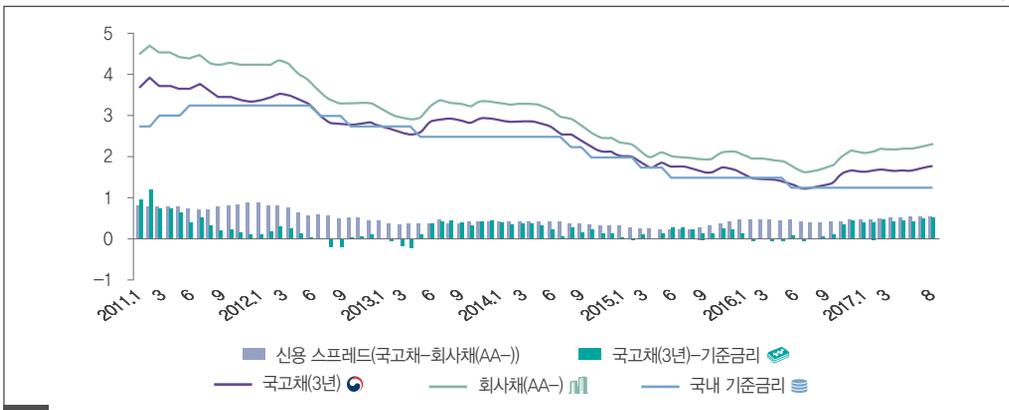
[그림 15] 외국인 국내채권 월별 투자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16] 기준금리 및 국고채금리 변화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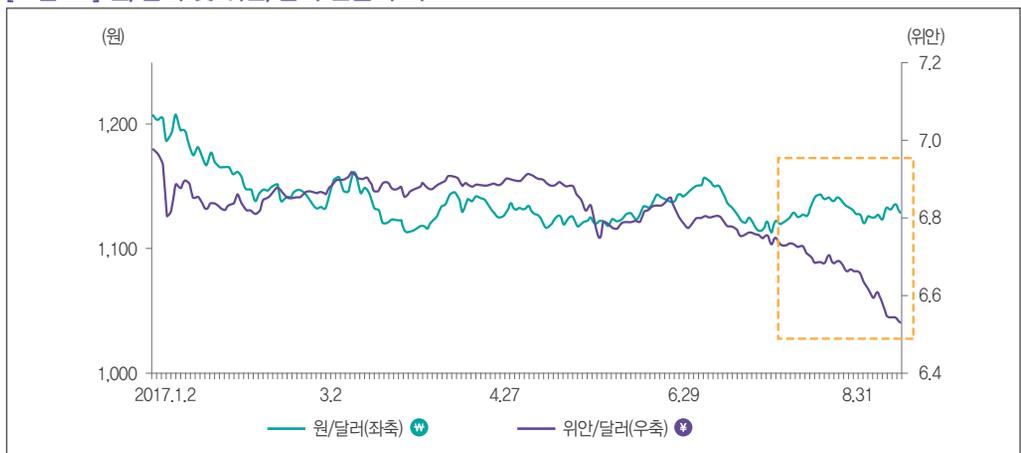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융긴축지연 기대가 교차되면서 높은 등락을 지속

- 2017년 8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31원으로 3개월 연속 1,13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에 이어 높은 등락세
- 상순에는 북한 미사일문제가 부각되면서 1,144원(8월 11일)까지 상승했으나 미연준의 금융긴축 완화(금리인상 지연) 기대가 높아지자 월말 1,127원으로 하락
- 미국물가 둔화에 따른 통화관리여건 완화, 고조된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의 완화 기대, 위안화 강세 등이 중순 이후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미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17. 4월)2.2 → (5월)1.9 → (6월)1.6 → (7월)1.7
 - 위안화/달러(기말): ('17. 4월)6.898 → (5월)6.784 → (6월)6.772 → (7월)6.729
- 위안화 강세는 국제적인 달러화 약세, 양호한 중국경제성장세,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 이후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자본통제 등에 기인
 - 미달러화지수(월말): ('17. 5월)92.11 → (6월)90.53 → (7월)87.81 → (8월)87.78
 - 중국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16.3/4)6.7 → (4/4)6.8 → ('17.1/4)6.9 → (2/4)6.9
- 향후 원/달러 환율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환율 상승요인), 미연준의 긴축지연 가능성(환율 하락요인) 등이 공존하고 있어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
 - 지정학적리스크 완화 여부에 따라 환율추세가 좌우될 전망

[그림 17] 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 요인 분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김중혁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6

최근 소비자물가는 2013년 이후 최초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치에 도달

- 2017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물가기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2.0%에 도달
 - 자연재해 및 어획량감소로 인한 국내 신선식품 공급 감소,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 세계 경기 회복 등에 주로 기인
- 통화당국이 2016년부터 운영해온 2.0% 중기물가안정목표에 근접
 - 통화당국은 2000년부터 지속해온 3.0% 물가안정목표수준을 낮추어 2016부터 3년간 2.0% 수준을 목표로 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 중

2017년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에 대한 공급측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 최근 식료품 및 에너지 지수 등 공급측 요인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
 - 동기간 공급측 물가상승요인을 배제한 근원물가지수의 기여도는 하락
-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2017년 상반기 중 공급측 물가상승요인과 관련있는 항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
 - 지출목적별 기여도 분석 결과 식료품, 교통, 연료 등 국내의 공급측 요인과 관련 깊은 지출 항목의 기여도가 상승
 - 품목성질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등의 기여도가 상승하였으나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수요측 요인의 기여도는 하락

실증분석 결과 2000~2017년 기간 중 국내 수요측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해외 총수요압력, 수입물가 등 해외 요인과 국내 총수요압력, 실질가계소득 등 국내 요인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해외 수요 및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2~4분기 후 최대 상승
 - 국내 수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즉각적이고 지속성 있게 반응

국내 실질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

-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 해외 공급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물가상승은 경기회복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래 물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
- 국내 실질수요가 견조한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음
 - 실질가계소득 증가, 가계부채부담 비율 감소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2017년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을 지속하여 통화당국 물가안정목표치에 도달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상반기 중 월평균 2.0%를 기록하여 2012년 하반기 이후 최초로 반기 평균 상승률 2.0%에 도달
 - 통화정책당국은 2016~201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를 목표로 하는 중기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 중이나 2016년 전년동기대비 1.0% 상승에 그쳐 목표치를 하회
 - 하지만 금년들어 2013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물가기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화 정책당국이 제시한 중기물가안정목표치(2.0%)에 근접

공급측 물가상승요인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주도

- 2017년 상반기 중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 지수 상승률은 월평균 3.4%,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월평균 7.5%를 기록
 - 반면 공급충격을 배제한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은 2017년 상반기 월평균 1.6%에 그치는 등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은 미약한 편

[그림 1]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근원물가 상승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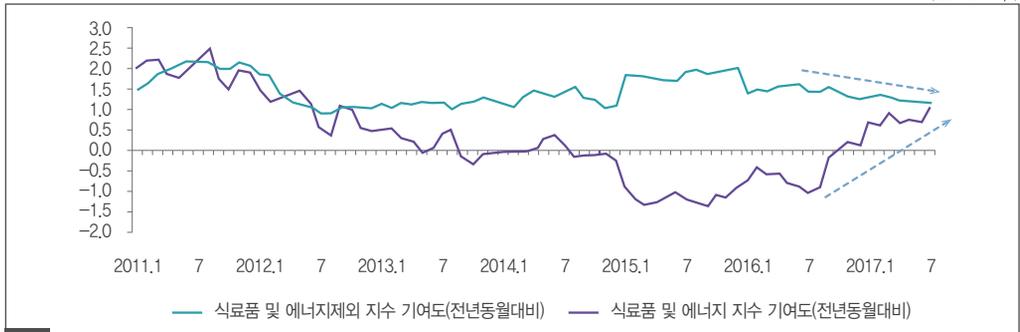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최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소비자물가의 방향을 분석할 필요

[그림 2] 공급과 수요측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변화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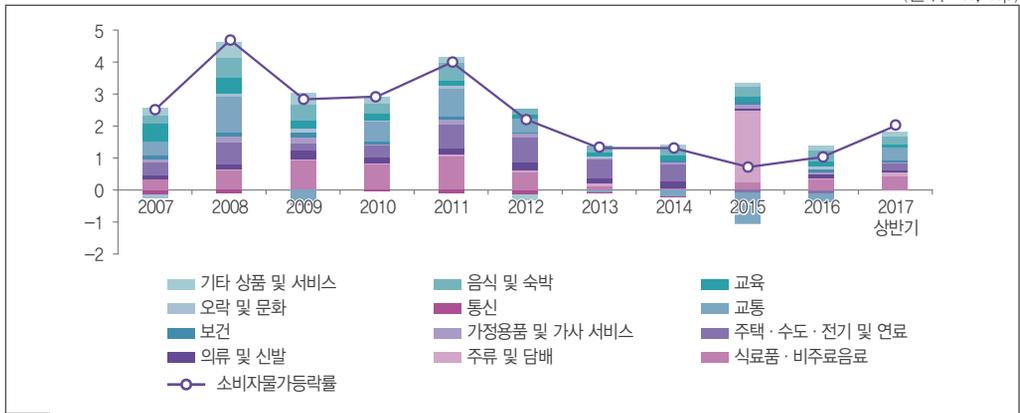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최근 공급측 요인과 관련 깊은 지출항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

- ◎ 최근 10년 간 지출목적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중 식료품, 교통,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
 - 2016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변동성 증가에 영향을 받은 교통 및 연료 가격의 기여도가 상승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경우 2011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자연재해 및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로 반전
- ◎ 이는 금년들어 해외 공급충격 및 국내 신선식품 공급감소에 따른 공급측면 물가상승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음식 및 숙박, 교육 등 국내 수요와 관련이 깊은 항목의 경우 기여도에 큰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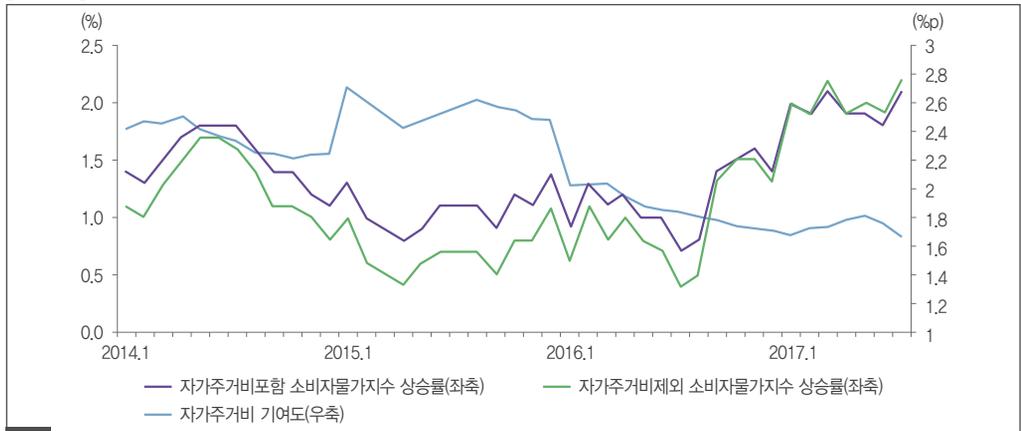
[그림 3] 지출목적별 기여도 분석

(단위: %, %p)



자료: 통계청

[그림 5]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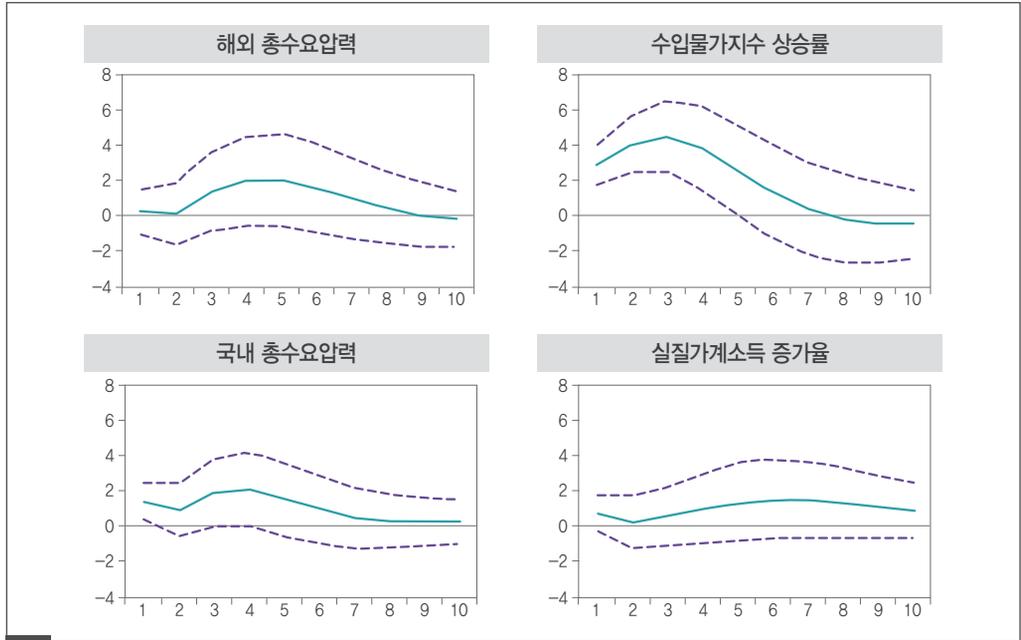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 요인 실증분석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 (Vectorautoregressive, VAR) 분석을 실시

- ◎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외 총수요압력³⁾, 국내 총수요압력⁴⁾, 수입물가지수⁵⁾, 실질가계소득⁶⁾을 고려
 - 해외 총수요압력과 국내 총수요압력은 수요측 요인을, 수입물가지수는 공급측 요인을 식별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최근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가계소득 지표를 선택

- 3) 해외 총수요압력은 OECD 경제성장률에서 HP Filter를 이용하여 장기추세치를 제거한 변동분을 사용하였으며, 세계(World)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여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산출됨
- 4) 국내 총수요압력은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HP Filter를 이용하여 장기추세치를 제거한 변동분을 사용하였으며,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방법(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SVAR 추정)을 사용해도 실증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
- 5)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 총지수, 원화기준)를 사용
- 6)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를 분기별 자료로 전환하여 사용

[그림 6]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주: 실선은 1 표준편차만큼 정(+)의 외부충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며, 점선은 90% 수준 신뢰구간을 나타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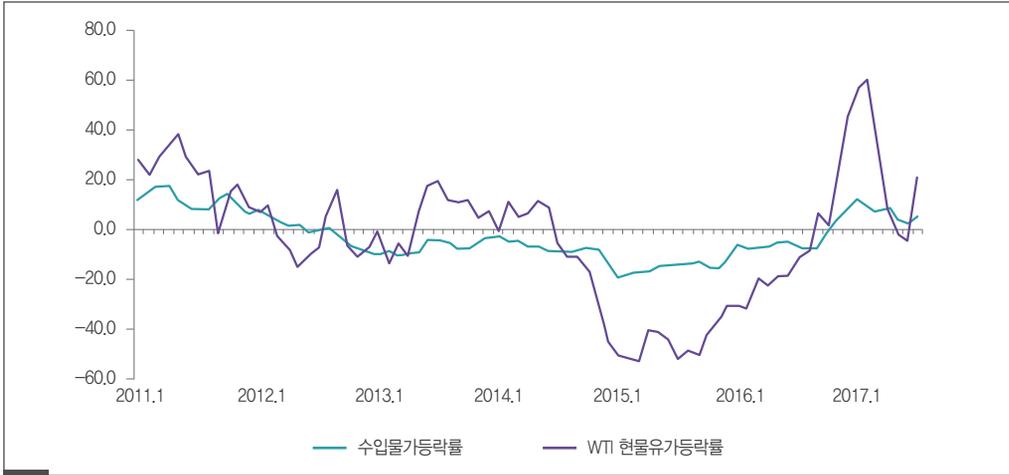
결론 및 시사점

당분간 공급측 요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해외 공급측면 불안요소 상존
 - 최근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영향으로 미국 원유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
- 농축수산물 공급 감소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 현상은 일시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7] 수입물가상승률 및 국제유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해외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은 부작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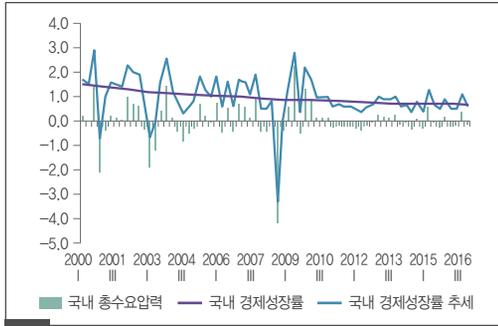
- ◎ 국내외 공급충격에 의한 일시적 소비자물가 상승은 실질수요 증가에 의한 물가상승과 달리 경기 회복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국내 실질수요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증가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위축 및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공급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

수요 측면의 경우, 당분간 해외 수요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

- ◎ 국내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중이나 저성장기조의 지속과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으로 국내 실질수요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의 장기추세치는 2000년 이후 2017년 2분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내 수요 부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세계 총수요압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어 해외 수요 증가분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경제성장률 장기추세치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주도로 실시된 저금리기조와 양적완화 등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 기초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8] 국내 및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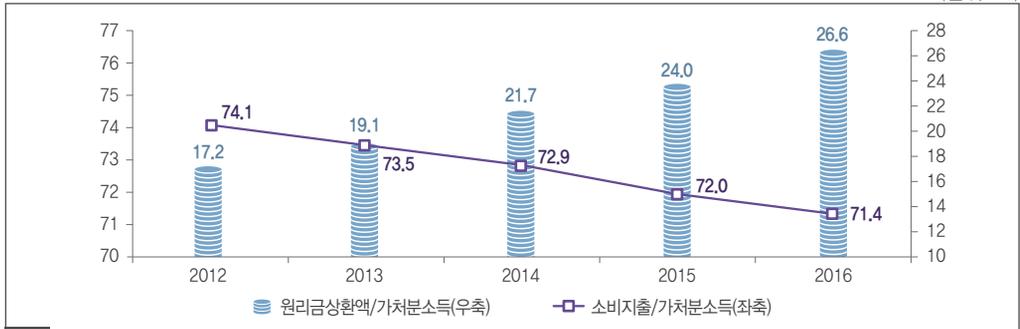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OECD

국내 실질수요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필요

- ◎ 거시경제정책 수립 시 근원물가 상승률, 계층별·연령별 실업률 등 국내 실질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
 - 공급측 요인을 배제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장기간 중기물가안정목표치 2.0%를 하회하고 있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은 미약한 수준
 - 높은 청년 실업률 및 빠른 고령화 현상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실질수요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음
- ◎ 실질가계소득 증가, 가계부채부담 감소, 고용확대 등 가계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최근 높은 가계부채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위한 가계부채부담 감소 노력이 필요
 -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안정화 정책은 경기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필수품 위주의 소비를 늘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9] 국내 가계대출부담 및 소비지출 현황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경기확장기 분석과 특징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유승선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8

경기확장기임에도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완만한 경기흐름이 장기간 지속

- 과거 경기확장기에는 수출증대를 계기로 경기회복세가 시작되었으나 금번 확장기에는 수출이 부진
 - 세계경제 저성장세,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신흥개도국 부진 등에 기인
 -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성장세도 완만
- 국내외 충격에 경기가 예민하게 반응하여 경기상승세의 견고함이 부족
- 2000년대 들어 경기회복이 완만할수록 경기확장기간이 길어지는 경향

금번 경기확장기는 과거 확장기에 비해 경기동행지수의 역동성이 약화

- 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데 기인
 - 최근 3회 경기순환(9, 10, 11순환기) 확장기에 대해 경기동행지수와 동지수를 구성하는 7개 지표 간에 변동성(분산·공분산)을 비교 분석
- 경제부문 간 판매·매입(혹은 투입·산출) 등 다양한 연계고리를 통해 경제지표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금번 11순환 확장기에서 상호 영향력이 약화
 -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주택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였으나 여타 부문으로의 경기진작 확산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
- 특히 서비스업생산지수, 고용 부문이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 탄력성이 약화되어 소비 관련 부문이 취약해진 모습

정책당국이 경제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부문을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

- 경제부문간 상호 영향력이 축소되어 특정부문에 집중적인 지원 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감소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지원방식 보다 동일한 재원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력이 높은 부문을 발굴할 필요
 -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원대상이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
 - 여타 부문으로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효과가 높은 대상을 발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소비 관련 부문의 회복이 경기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 소비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2016년 GDP 기준 48.1%)을 차지
 -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된 소비 관련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이 긴급

01

최근 경기종합지수 동향의 특징

현재 국내경기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경기확장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간주할 경우 최장기간 기록

- ◎ 2017년 7월 현재 52개월로 통계청이 경기기준일을 선정하기 시작한 1972년 3월 이후 최장기간
 - 두 번째 긴 확장기는 1975년 7월에 시작된 제2순환기의 4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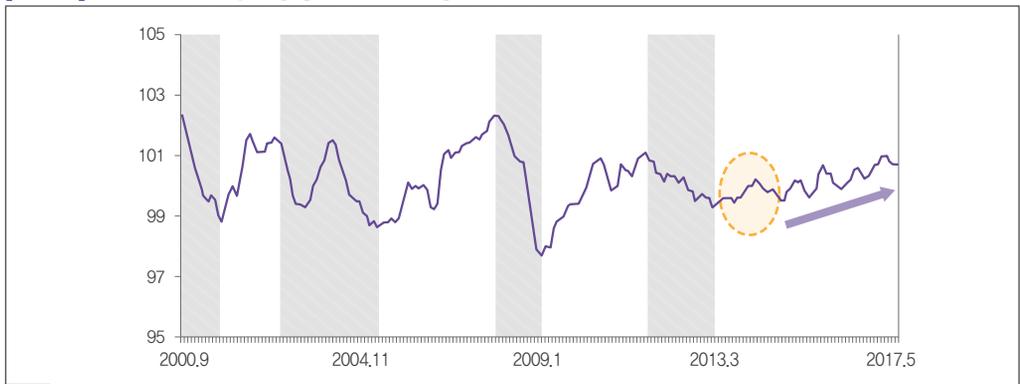
[표 1] 2000년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8순환	2001.7	2002.12	2005.4	17	28	45
9순환	2005.4	2008.1	2009.2	33	13	46
10순환	2009.2	2011.8	2013.3	30	19	49
11순환	2013.3	-	-	-	-	-

자료: 통계청

- ◎ 경기확장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3년 3월~2014년 3월([그림 1] 내 원형 점선)이 독립된 경기순환기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정여부가 불투명
 - ①순환기가 20개월(특히 확장기가 12개월)로 짧고, ②진폭도 과거에 비해 매우 좁으며, ③동기기간 이후에도 유사한 짧은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때문
- ◎ 본 자료에서는 현재 11순환 경기확장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

[그림 1] 2000년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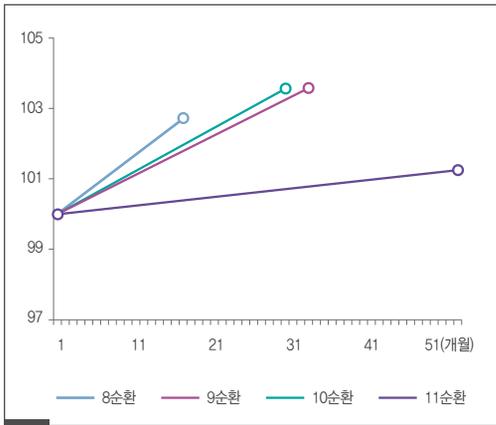
완만한 흐름의 경기확장세가 금번 확장기의 특징

- ◎ 경기확장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3회와 금번 경기확장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기울기를 비교
 - 경기확장 기울기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시작점(경기 저점)과 종료시점(경기 정점)을 직선으로 연결
 - 2000년대 이후 4회의 경기확장기를 비교해보면 8순환, 10순환, 9순환 순으로 기울기가 높고 금번 11순환의 경기확장기에서 기울기가 낮음
 - 특히 앞서 3회의 기울기 사이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금번 11순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하락
- ◎ 2000년대 들어 기울기가 낮을수록 경기확장기가 길어지는 경향

[그림 2] 경기순환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확장기 비교



[그림 3] 경기확장기별 순환변동치의 기울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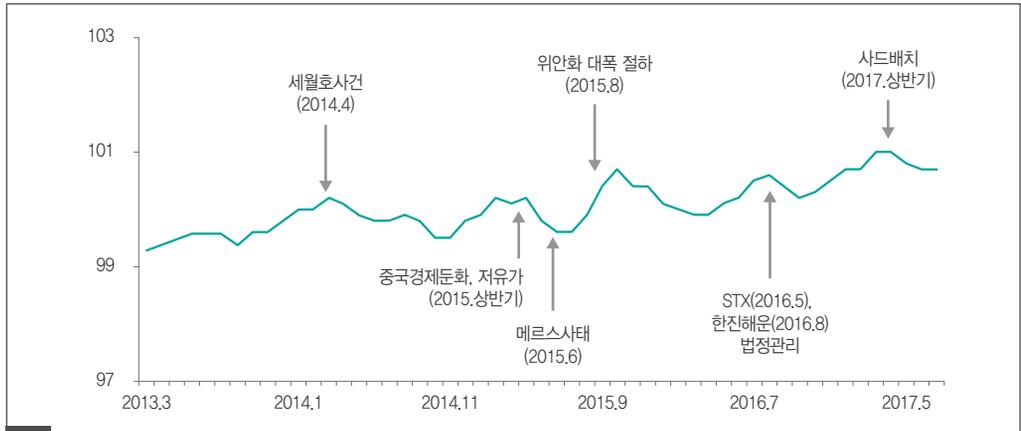


주: 1) 경기확장기 시작점(저점)을 100으로 통일시켜 비교
 2) 기울기는 경기확장기 시작점(저점)과 종료점(정점)을 직선으로 연결
 자료: 통계청

국내경기가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회복세에 견고함이 부족

- ◎ 금번 경기순환 확장기에 경기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국내경제가 국내외 충격에 민감했던 점도 한 요인
- ◎ 경기상승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국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가 다시 일시적으로 위축
 - 국내적으로는 2014년 세월호사건, 2015년 메르스사태, 2016년 국내 조선·해운업 침체 및 동중업중대기업 법정관리신청 등
 - 국외적으로는 2015년부터 영향이 본격화된 중국경제 둔화 및 위안화 절하, 저유가 등

[그림 4] 11순환 확장기 중 순환변동치의 변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02

경기확장기별 주요 경제지표의 동향 비교

금번 경기확장기의 큰 특징은 경기확장기임에도 수출이 부진

- 과거 경기확장기에는 수출증대를 계기로 경기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번 확장기에는 수출이 부진
 - 실질 수출출하지수를 보면 9순환, 10순환에서는 확장기 초부터 수출이 뚜렷한 호조를 나타냈으나 금번 확장기에는 2017년 1/4분기에도 2013년 수준을 하회([그림 5] 참조)
 - 세계적인 저성장세,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신흥개도국 부진, 국제적인 수출단가 하락 등에 기인
- 다만 2016년 4/4분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IT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수출여건이 호전
 - 수출단가(전년동기대비, %): 2016년 4/4분기 3.1 → 2017년 1/4분기 10.0 → 2/4분기 17.0

2016년 4/4분기부터 수출여건 호전, 설비투자 증가 등 경기회복 초기 전형화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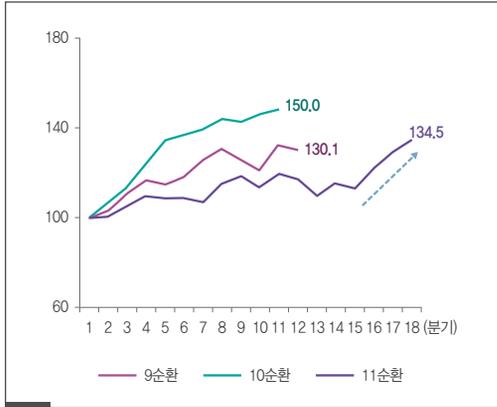
- 수출단가가 개선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2016년 4/4분기부터 설비투자가 개선
 - 2017년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그림 6] 참조)

[그림 5] 경기확장기별 수출총하 추이



주: 9순환(05.2/4), 10순환(09.1/4), 11순환(13.1/4) 경기저점을 100으로 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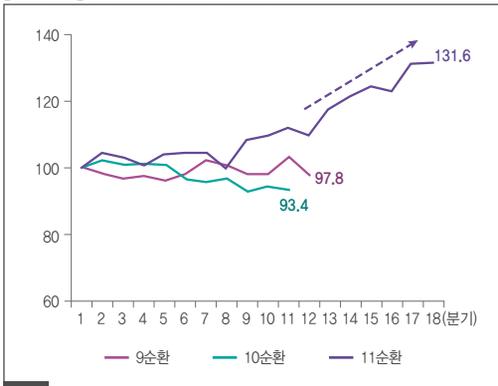
[그림 6] 경기확장기별 설비투자 추이



건설투자가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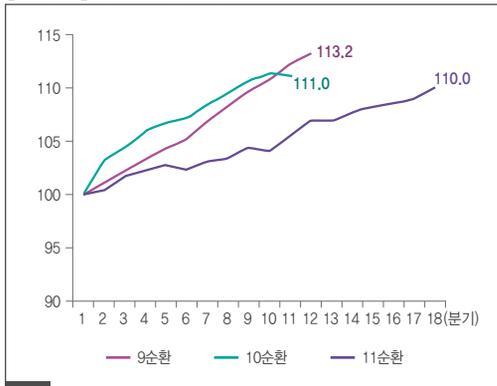
- 201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높은 수준: 2015년 1.0%p(GDP성장률 2.8%) → 2016년 1.6%p(GDP성장률 2.8%) → 2017년 2/4분기 1.5%p(GDP성장률 2.7%)
 -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자 정부가 주택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및 지원을 추진한 데 기인
- 건설투자 호조와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도 호전되는 등 여타 지표는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2017년 들어서도 전년동기대비 2.0(1/4분기)~2.3%(3/4분기)로 부진([그림 8] 참조)

[그림 7] 경기확장기별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그림 8] 경기확장기별 민간소비 추이



- 이하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경기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제지표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의 구성항목을 대상으로 분석 시도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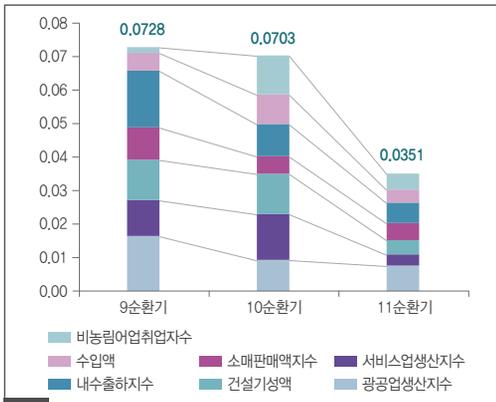
경기동행지수와 동지수 구성지표의 변동성을 비교하면 구성지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파악이 가능

- 최근 경기흐름의 주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수단으로 IMF(2007)에서 사용된 분산분해(Volatility Decomposition)방법을 활용
 - 분석방법 소개와 구체적 분석결과는 박스를 참조
- 경기확장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분산)이 높아지는데, 이때 구성지표의 변동성도 함께 높아진다면 경기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 가능
 - 구성지표의 자체 변동성(분산)과 여타 지표와 상호 영향력(공분산)의 구분이 가능하며, 양자의 합으로 경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 경기동행지수는 7개 지표로 구성([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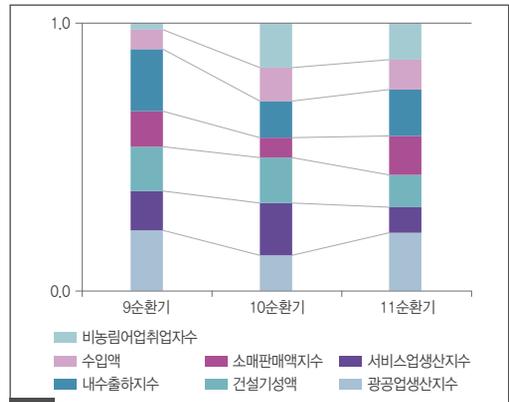
경기확장기임에도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못한 것은 구성지표 중 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에 주로 기인

- 최근 11순환 확장기에서 상대적으로 경기동행지수의 역동성이 약화
 -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이 9순환, 10순환 확장기에서 0.0728, 0.0703인 반면 11순환확장기에는 0.0351로 이전 절반 수준으로 축소([그림 9] 참조)
 - 또한 7개의 각 구성지표 별 변동성도 동시에 축소
 - 이는 경기확장기임에도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이전에 비해 활력이 약화되어 경기상승에 대한 기여가 축소되었음을 의미

[그림 9] 경기확장기별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의 경기에 미치는 기여도 변화



[그림 10] 구성지표 기여도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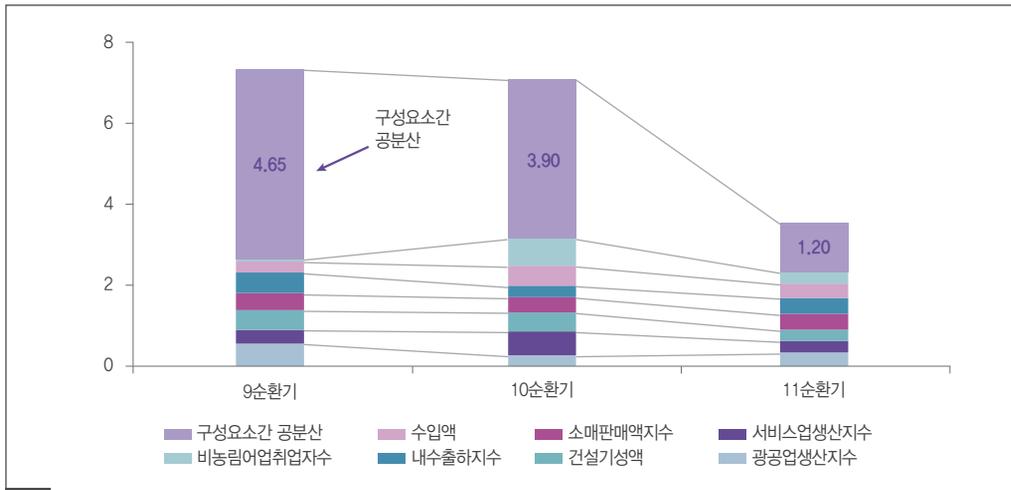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위 값은 각 구성지표의 자체 분산과 타 지표와 공분산의 합(구체적 값은 박스 참조)
 자료: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경기의 역동성이 약화된 것은 특히 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 변동성 축소에 기인
 - 10순환 확장기에 비해 11순환 확장기에서 전체 구성지표 중 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 비중이 하락했기 때문([그림 10]과 박스 참조)
 - 구성지표 별 변동성의 비중은 경기동행지수 변동성에 대한 기여율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여율의 비중이 하락했다는 것은 경기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축소되었음을 의미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 간 상호관계가 약화

- ◉ 경제부문 간 판매·매입(혹은 투입·산출) 등 다양한 연계 고리를 통해 경제지표 상호 간 영향을 미침
 - 본 분석에서는 구성경제지표 간 상호 관계(혹은 상호 영향력)를 추정하기 위해 공분산을 계산
 - 예를 들면 비농업취업자수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소매판매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분산이 감소하면 그 효과가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그림 11] 경기확장기별 구성요소 간 상호 영향력 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 간 상호 영향력이 약화된 것
 - 구성요소 간 공분산을 모두 합한 값이 9순환, 10순환 확장기는 각각 4.65, 3.90에 이르렀으나 금번 11순환 확장기에는 1.20으로 크게 축소([그림 11] 참조)
- ◉ 이는 특정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의 경기진작효과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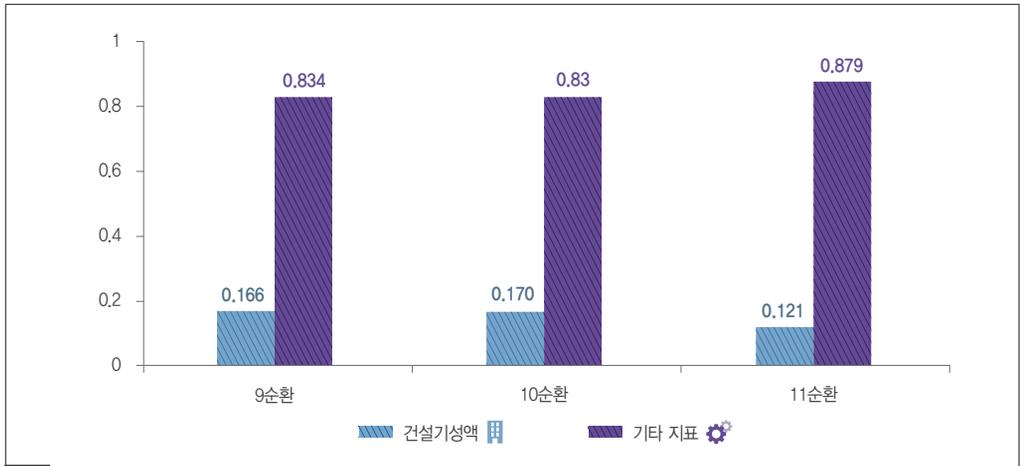
1) 각 구성지표의 분산·공분산의 합이 1(혹은 100%)이 되게 됨

- 예를 들면 2015년 전후 소비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액이 증가하여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변동성의 비중이 이전 순환기에 비해 상승
- 그러나 같은 소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생산의 부진이 지속되어 여타 부문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추정

건설투자의 활성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 저조

- 건설투자가 국내경제를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켰다고 보기는 곤란
 -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오히려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건설기성액의 변동성이 0.121로 9순환(0.166), 10순환(0.170) 경기확장기에 비해 축소
 - 경기동행지수를 작성 시 건설투자와 같이 평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는 표준편차로 조정하는데 본 분석에서도 조정된 건설기성액을 이용하기 때문
 - 이와 같이 조정하는 것은 경기판단은 경제전반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므로 건설투자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다수의 주요 경기지표, 경제총량지표인 GD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위함²⁾

[그림 12] 경기확장기별 건설투자 및 기타 구성지표의 변동성의 비중



주: 변동성은 구성지표의 분산·공분산의 합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특정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해서 경기가 비례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아님. 통계청은 경기동행지수 작성 시 특정 구성지표의 변동이 동지수를 좌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전체 구성지표에 대해 전월비 증감율의 표준편차를 구한 후 표준편차의 합으로 나눈 값(표준화 인자값, 가중치 역할)을 개별 구성지표에 곱함으로써 조정

시사점

-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부문을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
 - 경제부문간 상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특정부문에 집중적인 지원 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감소했다는 의미
 - 예를 들면 건설투자의 활성화가 전반적 국내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2015년 소비세율 인하등 소비활성화정책이 소매판매촉진효과는 있었으나, 서비스소비 등 여타 소비의 확산효과는 저조
 - 이와 같이 부문 간 상호 영향력이 축소됨에 따라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지원방식 보다 동일한 재원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 경제활성화정책 추진 시 여타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부문을 발굴할 필요
 -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원대상이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여타 부문으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 소비 관련 부문의 회복이 경기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서비스업생산지수가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약화되는 등 소비 관련 부문이 취약해지는 모습
 - 또한 고용부문의 회복탄력성이 약화된 점도 간접적으로 소비에는 약화요인으로 작용
 - 소비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2016년 GDP 기준 48.1%)을 차지
 - 금번 경기확장기에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된 소비 관련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이 긴급³⁾

3) 본 자료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현재까지 11순환 확장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 만약 새로운 경기순환일 지점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경기동행지수에 대한 분산분해

최근 경기변동의 주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수단으로 분산분해 (Volatility Decomposition)를 활용

- ◎ IMF(2007)⁴⁾는 세계경기변동에서 지역별 기여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 분해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본 분석에도 이를 준용
- ◎ 경기동행지수의 분산을 아래 식에 따라 구성항목(7개)의 분산·공분산으로 분해

$$y = \sum_{i=1}^n (com_i)$$

$$VAR(y) = \sum_{i=1}^n VAR(com_i) + \sum_{\substack{i=1, j=1, \\ i \neq j}}^n COV(com_i, com_j)$$

- 여기서 y 는 월별 경기동행지수의 전월대비 변동률(%)이며, com 은 동행지수 구성요소의 기여도(%p), VAR 은 분산, COV 는 공분산을 의미

경기동행지수의 분산과 특정 구성요소(경제지표)의 분산·공분산을 비교하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이 가능

- ◎ 경기확장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분산)이 상승
 - 이때 구성지표의 변동성(분산·공분산)이 함께 높아진다면 경기동행지수를 상승(즉 경기 상승)시키는 데 동지표가 기여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여도(경제성장 기여도 등)와 유사하지만 기여도는 단기간(연간 혹은 분기)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며, 여러 해를 대상으로는 곤란
- ◎ 구성지표 간 공분산은 변수 간 상호 영향력을 의미하여 구성지표 간 연관성 파악이 가능
 - 물론 통계적 연관성이므로 추가 해석이 요구되기도 함
- ◎ 최근 3회 경기순환기(9, 10, 11순환기)의 확장기를 대상으로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7개 구성지표에 대해 분석
 - 7개 구성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 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 ◎ 경기동행지수와 구성지표 간 분산분석의 결과와 구성지표 별 분산·공분산의 비중의 변화는 표와 같음
 - 각 구성지표의 값에는 자체 변동성(분산)과 구성지표 간 연관성(공분산)의 합을 의미

4) IMF,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Global Business Cycle", IMF World Economic Outlook, Chapter 5, Oct. 2007, pp171~198.

경기확장기·구성지표 별 변동성(분산·공분산)

구성요소	9순환 확장기	10순환 확장기	11순환 확장기
광공업생산지수	0.0164	0.0093	0.0076
내수출하지수	0.0169	0.0096	0.0061
소매판매액지수	0.0097	0.0052	0.0051
비농림어업취업자수	0.0017	0.0116	0.0048
건설기성액	0.0121	0.0120	0.0043
수입액	0.0053	0.0088	0.0039
서비스업생산지수	0.0107	0.0137	0.0034
합계	0.0728	0.0703	0.0351

경기확장기·구성지표 별 분산·공분산의 비중 변화

10순환 대비 11순환 비중	구성요소	9순환 확장기	10순환 확장기(A)	11순환 확장기(B)	차(B-A)
확대	광공업생산지수	0.226	0.132	0.216	0.084
	내수출하지수	0.232	0.137	0.173	0.036
	소매판매액지수	0.133	0.075	0.146	0.071
축소	비농림어업취업자수	0.023	0.165	0.136	-0.029
	건설기성액	0.166	0.170	0.121	-0.049
	수입액	0.073	0.125	0.112	-0.013
	서비스업생산지수	0.147	0.195	0.096	-0.099
합 계		1.000	1.000	1.0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OECD국가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서비스업 특징

–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김윤희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70

OECD국가의 일자리와 총 부가가치 생산에서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00년 67.9%에서 2015년 74.4%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 비중도 69%에서 2015년 71.0%로 증가하였음
 - 고용 비중에서는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부동산·사업서비스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OECD국가와 한국 간 서비스업종별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 차이 뚜렷

- 국내 고용 비중은 OECD국가에 비해 낮으나 격차는 지난 10년간 축소
 -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69.7%로 증가하여 OECD국가와의 격차가 5.1%p에서 4.7%p로 축소됨
-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OECD국가에 비해 낮으며 그 격차도 지난 10년간 확대
 - 한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6년 60.2%에서 2015년 59.4%로 감소하여 OECD국가와의 격차가 9.6%p에서 11.6%p로 확대됨
- 국내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은 OECD국가에 비해 낮으며 업종별 편차 존재
 - 한국 도소매·숙박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은 OECD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높음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 제고 및 변동성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관찰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OECD국가와 비교 시, 지난 10년간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부가가치 비중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음
 - 복지재정지출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비중이 증가될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제고를 모색할 필요
-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 변동의 완화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별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차별화된 대응이 중요
 - OECD국가 대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도소매·숙박업의 고용 지표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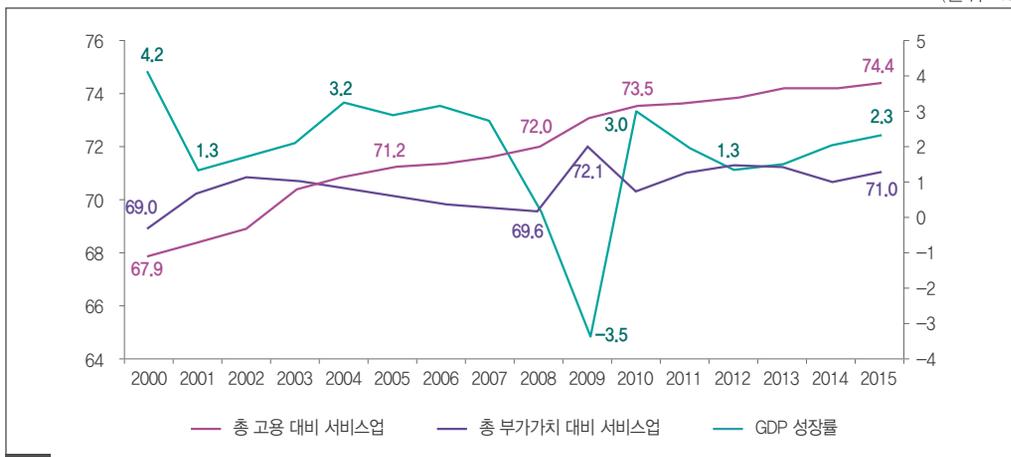
OECD국가 서비스업 동향¹⁾

OECD국가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생산에서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00~2015년 지속적으로 증가(6.5%p)
-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0~2015년 2.0%p 증가
-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간 경기역행적(counter cyclical)으로 변동하여, 하방 충격 발생 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임
 - 지난 16년간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계수는 -0.27 이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계수는 -0.64 임

[그림 1] OECD국가 서비스업 동향

(단위: %)



주: OECD의 서비스업은 i)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O-U), ii) 도소매·숙박업(G-I), iii) 부동산·사업서비스업(L-N), iv) 금융·보험업(K), v) 방송 통신업(J) 포함으로 분류됨(괄호 안은 ISIC ver.4 code)

자료: OECD STAN database²⁾, OECD Economic Outlook(2017. 6), 한국은행

- 1) 본고는 OECD(2005)에서 분석한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OECD국가를 대상으로 2000~2015년 평균 및 추이를 비교하며, 서비스업종의 경우 OECD STAN data의 분류기준에 따라 5대 세부 업종으로 분류함, OECD (2005), Growth in Services: Fostering employment, productivity and innovation,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in 2005
- 2) OECD Structural Analysis Statistics: OECD STAN 자료는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자료(SNA 2008)를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adjust)된 자료로서 주로 산업 성과분석을 위해 쓰이며 현재는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ntra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4차 개정안에 따라 2017년 9월 기준 26개국에 대해 1970년부터 2016년(2016년도는 4개의 국가만 일부 변수별로 자료 제공)까지 30개의 변수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OECD국가 고용 비중의 서비스업종별 비교 시,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높음

- ◎ 2015년 기준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종별 고용 비중은 ①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② 도소매·숙박업, ③ 부동산·사업서비스업, ④ 금융·보험업, ⑤ 방송통신업 순임
- 지난 16년간 고용 비중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3.11%p), 부동산·사업서비스업(2.47%p) 및 도소매·숙박업(1.19%p)임

[표 1] OECD 25개국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종별 고용 비중

(단위: %, %p)

	도소매·숙박업	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
2000(A)	24.2	3.0	3.3	9.9	27.5	67.9
2001	24.3	3.0	3.3	10.1	27.7	68.4
2002	24.3	2.9	3.4	10.2	28.2	68.9
2003	25.2	2.8	3.3	10.6	28.5	70.4
2004	25.6	2.8	3.3	10.7	28.5	70.9
2005	25.7	2.8	3.3	10.9	28.6	71.2
2006	25.5	2.8	3.3	11.1	28.6	71.4
2007	25.5	2.8	3.3	11.4	28.6	71.6
2008	25.5	2.8	3.3	11.4	29.0	72.0
2009	25.5	2.8	3.3	11.4	30.1	73.1
2010	25.6	2.8	3.2	11.5	30.4	73.5
2011	25.6	2.8	3.2	11.8	30.3	73.7
2012	25.5	2.8	3.2	12.0	30.4	73.9
2013	25.5	2.9	3.2	12.1	30.6	74.2
2014	25.5	2.9	3.1	12.2	30.5	74.2
2015(B)	25.4	2.9	3.1	12.3	30.6	74.4
B-A	1.19	-0.01	-0.23	2.47	3.11	6.53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OECD국가 부가가치 비중의 서비스업종별 비교 시, 도소매·숙박업이 가장 높음

- ◎ 2015년 기준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은 ① 도소매·숙박업, ②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③ 부동산·사업서비스업, ④ 금융·보험업, ⑤ 방송통신업 순임
- 지난 16년간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분야는 부동산·사업서비스업(3.05%p)과 방송통신업(1.10%p)임

[표 2] OECD 25개국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p)

	도소매·숙박업	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 서비스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
2000(A)	22.6	4.2	5.7	16.3	20.3	69.0
2001	23.1	4.5	5.6	16.7	20.4	70.2
2002	23.3	4.7	5.5	17.0	20.4	70.8
2003	23.0	4.8	5.4	17.2	20.4	70.8
2004	23.3	4.7	5.3	17.3	20.0	70.5
2005	23.0	4.7	5.3	17.6	19.6	70.1
2006	22.4	4.7	5.2	17.9	19.6	69.8
2007	21.9	4.8	5.3	18.2	19.4	69.7
2008	21.6	5.0	4.6	18.7	19.6	69.6
2009	21.5	5.2	5.0	19.6	20.8	72.1
2010	21.2	5.1	4.9	19.0	20.1	70.3
2011	21.5	5.1	4.8	19.4	20.3	71.1
2012	21.8	5.1	4.9	19.2	20.3	71.3
2013	21.8	5.1	5.2	19.2	20.0	71.3
2014	21.3	5.2	5.2	19.2	19.9	70.7
2015(B)	21.0	5.3	5.4	19.3	20.1	71.0
B-A	-1.55	1.10	-0.34	3.05	-0.24	2.06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02

OECD국가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서비스업 특징

가.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비교

전 산업 대비 국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OECD국가와 격차도 축소

◎ 10년 평균 국내 서비스업 고용 비중(68.5%)은 OECD국가(73.2%)에 비해 낮음

- 지난 10년간 한국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3.4%p 증가하여 OECD국가(3.1%p)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표 3] OECD와 한국의 총고용 대비 서비스업 비중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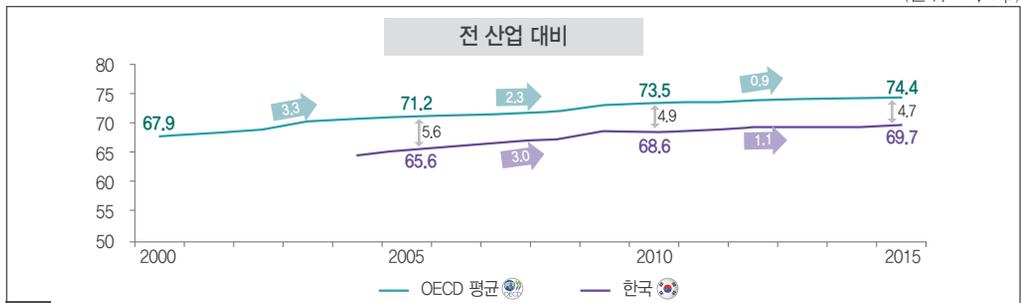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Y평균	10Y증감
OECD	71.4	71.6	72.0	73.1	73.5	73.7	73.9	74.2	74.2	74.4	73.2	3.1
한국	66.3	67.0	67.4	68.7	68.6	68.9	69.4	69.4	69.5	69.7	68.5	3.4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 OECD국가와의 격차는 2005년 5.6%p에서 2015년 4.7%p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2006~2010년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로 보임

[그림 2] OECD와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 비교

(단위: %, %p)



주: 한국 경제활동인구(고용 비중) 자료는 2004년부터 제공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전 산업 대비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증감을 반복했으며 OECD국가와 격차는 확대

- 10년 평균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59.8%)은 OECD국가(70.7%)에 비해 낮음
 - 지난 10년간 한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8%p 감소하여 OECD국가의 부가가치 비중(1.2%p)이 증가한 것과 대비됨

[표 4] OECD와 한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비교

(단위: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Y평균	10Y증감
OECD	69.8	69.7	69.6	72.1	70.3	71.1	71.3	71.3	70.7	71.0	70.7	1.2
한국	60.2	60.3	61.2	60.7	59.3	59.1	59.5	59.3	59.6	59.4	59.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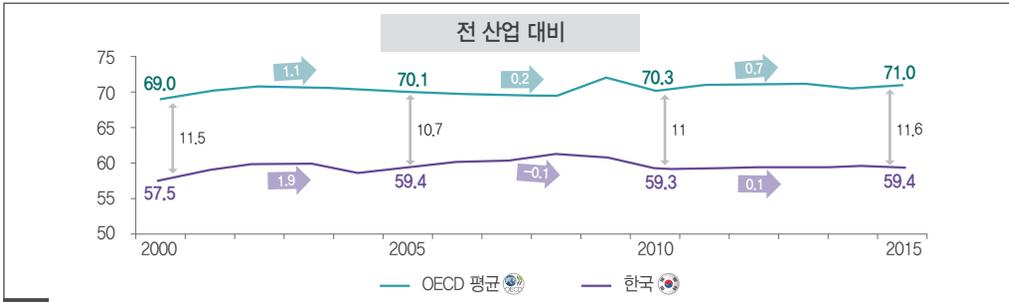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 같은 기간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OECD국가보다 높아졌기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짐³⁾
- OECD국가와의 격차는 증감을 반복: ('00)11.5%p → ('05)10.7%p → ('10)11.0%p → ('15)11.6%p

3)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10년 평균은 29.7%이며 이는 OECD국가 평균(20.1%)보다 높음

[그림 3] OECD와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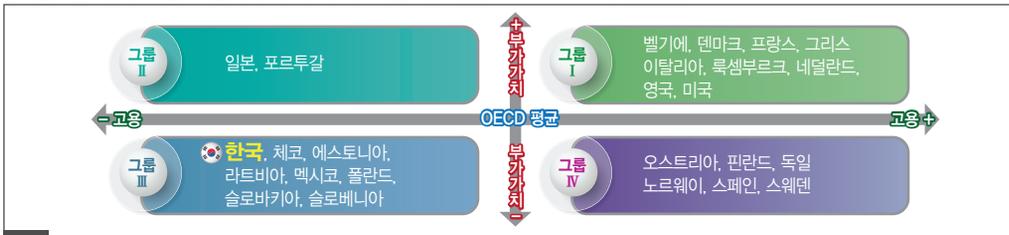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한국은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OECD평균에 비해 낮은 상태

- OECD 25개국을 대상으로 2000~2015년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평균을 산정한 후, 각국의 해당 지표와 OECD 평균을 비교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 한국은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OECD평균보다 모두 낮아서 체코, 폴란드, 멕시코 등과 함께 그룹 III에 포함
 - 이는 국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증가를 위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그림 4]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에 따른 OECD 25개국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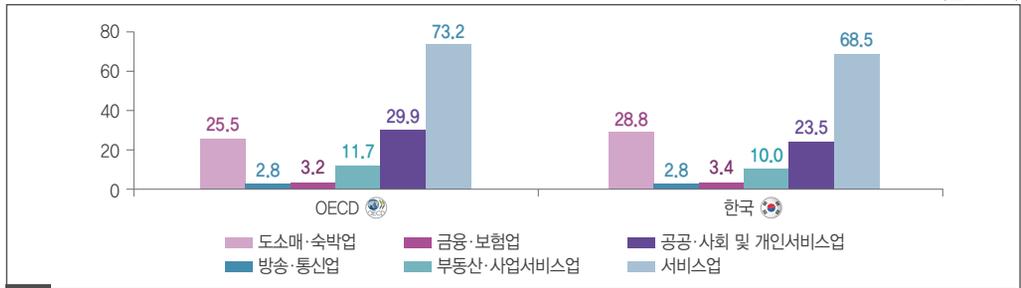
나. 서비스업종별 고용 비중 비교

OECD국가보다 국내 고용 비중이 낮은 것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기인

- 5대 서비스 업종 중 한국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OECD국가 보다 고용 비중이 낮으며, 도소매·숙박업의 고용 비중은 OECD국가 보다 높음
 - OECD 국가의 경우 공공행정,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이 포함된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한국보다 높음(6.4%p)
 - 한국은 도소매, 운수업 및 숙박업 관련 업종이 포함된 도소매·숙박업에서 고용 비중(28.8%)이 가장 높음

[그림 5] OECD와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고용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또한 같은 기간 한국 고용 비중의 변동성 지표 모두 OECD국가보다 높음

- 2004~2016년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동계수 비교 시,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 한국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음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한국(0.07)이 OECD(0.03)보다 약 2.3배 높음
 - 도소매·숙박업의 변동성은 한국(0.034)이 OECD(0.003)보다 약 11배 높음
 -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변동성은 한국이 OECD보다 약 2.5배 높음
- 고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이 OECD보다 서비스산업별로 변동성이 2.3~11배 높음

[표 5]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 업종 고용 비중의 변동성계수

	연도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숙박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한국	평균	22,989	29,104	9,698
	표준편차	1,605	1,001	1,073
	변동성계수	0.070	0.034	0.111
OECD	평균	29,693	25,527	11,564
	표준편차	0,923	0,089	0,516
	변동성계수	0.031	0.003	0.045

주: 1)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서 해당 변수의 상대적 변동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2)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12개년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다.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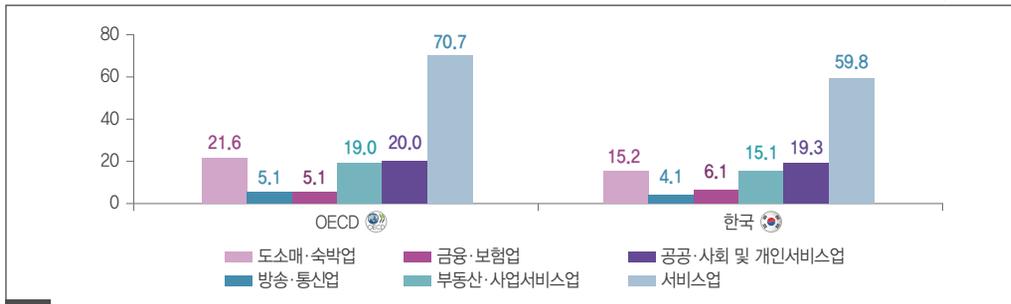
OECD국가와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의 차이는 주로 도소매·숙박업에 기인

- 한국은 5대 서비스 업종 대부분이 OECD국가보다 부가가치 비중이 낮음
 - 전체 서비스업 기준으로 약 10.9%p 낮음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19.3%)이 업종별 비교 시 가장 높음
 - 동 업종은 공공행정,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 등을 포함
- 도소매·숙박업은 OECD국가보다 부가가치 비중이 낮음.
 - 동 업종은 도소매, 운수업 및 숙박업 관련 업종을 포함

[그림 6] OECD와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같은 기간 국내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OECD국가보다 높게 변동

- 2004~2016년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계수 비교 시, 국내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상대적 변동성이 OECD국가 보다 높음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한국(0.034)이 OECD(0.02)보다 약 1.7배 높음
 - 도소매·숙박업의 변동성은 OECD(0.032)가 한국(0.013)보다 약 2.5배 높음
 -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변동성은 OECD(0.042)가 한국(0.023)보다 약 1.8배 높음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표 6]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 업종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계수

	연도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숙박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한국	평균	19.074	15.237	15.026
	표준편차	0.657	0.196	0.338
	변동성계수	0.034	0.013	0.023
OECD	평균	19.978	21.857	18.713
	표준편차	0.393	0.699	0.778
	변동성계수	0.020	0.032	0.042

주: 1)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서 해당 변수의 상대적 변동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2)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12개년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라.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 비교

OECD국가와 국내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차이는 주로 도소매·숙박업에 기인

- 1인당 부가가치 비중(C)은 고용 비중(A) 대비 부가가치 비중(B)과 같음

$$A(\text{고용 비중}) = \frac{L_i}{L}, \quad B(\text{부가가치 비중}) = \frac{VA_i}{VA}, \quad i = \text{서비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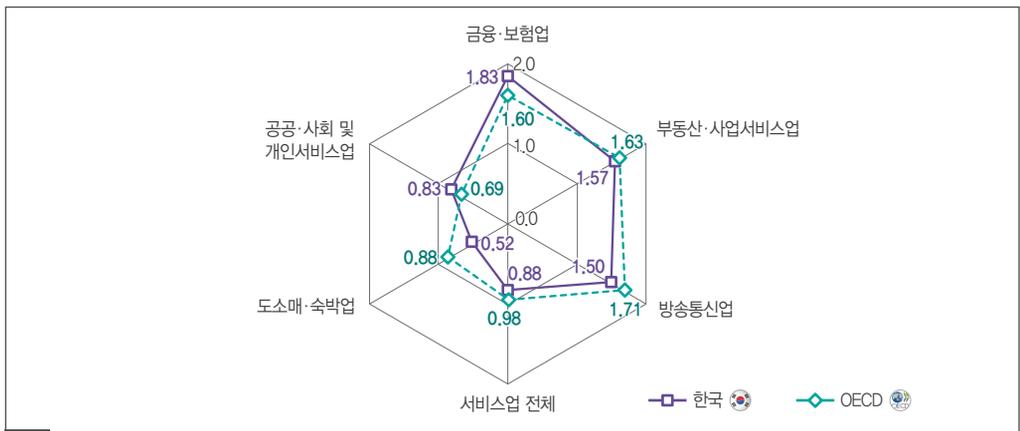
$$C(\text{1인당 부가가치 비중}) = \frac{\text{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text{전산업 1인당 부가가치}}$$

$$= \frac{\frac{VA_i}{L_i}}{\frac{VA}{L}} = \frac{VA_i}{VA} \cdot \frac{L}{L_i} = \frac{B}{A} = \frac{\text{부가가치 비중}}{\text{고용 비중}}$$

- 한국의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은 OECD보다 낮으며, 업종별 비교 시 3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소매·숙박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0.52배)이 OECD국가(0.88배)에 비해 낮음(0.36배)에 따라 동 분야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 제고가 필요
 - 오히려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이 OECD국가보다 각각 0.14배와 0.23배 높음

[그림 7] OECD와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비중 비교

(단위: 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기간 국내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은 OECD국가보다 높게 변동

- 2004~2016년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계수 비교 시, 국내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상대적 변동성이 OECD국가보다 높음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한국(0.045)이 OECD(0.024)보다 약 1.9배 높음
-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변동성은 OECD와 한국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도소매·숙박업의 변동성은 한국(0.105)이 OECD(0.026)보다 약 4배 높음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표 7]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 업종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계수

	연도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숙박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한국	평균	83,197	52,397	156,584
	표준편차	3,779	1,452	16,415
	변동성계수	0.045	0.028	0.105
OECD	평균	67,320	85,620	161,881
	표준편차	1,621	2,512	4,174
	변동성계수	0.024	0.029	0.026

주: 1)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서 해당 변수의 상대적 변동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2)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12개년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 OECD대비 한국의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을 비교 한 결과, 한국이 전체 9개 중 6개 부분에서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됨
 -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3개 지표에서 모두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만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우선적 대응이 요구됨
 - 도소매·숙박업의 변동성이 OECD대비 11배 이상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
 - 부가가치 비중과 1인당 부가가치 비중보다 우선적으로 고용 비중의 변동성 완화 필요

[표 8] 전 산업 대비 주요 서비스 업종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계수 비교 요약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숙박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한국	2.3	한국	11	한국	2.5
고용 비중	한국	2.3	한국	11	한국	2.5
부가가치 비중	한국	1.7	OECD	2.5	OECD	1.8
1인당 부가가치 비중	한국	1.9	OECD	1.04	한국	4.04

주: 1)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서 해당 변수의 상대적 변동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2)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12개년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03

시사점

향후 국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복지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 등을 배경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OECD국가들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및 국제무역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을 위해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⁴⁾

괜찮은(decent) 일자리 창출을 위해⁵⁾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비중 제고 필요

- OECD국가와 비교 시, 한국은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OECD평균에 비해 낮은 그룹에 속하며 1인당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역시 낮음
 - 이는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국가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의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별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차별화된 대응이 중요
 - 기존의 요소투입형 서비스업 성장 전략보다는 기술혁신(R&D)과 제도개혁⁶⁾에 기초한 총요소 생산성 주도의 성장 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임⁷⁾

또한 주요 서비스업종별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향후 한국에서 전체 고용 대비 공공행정, 지방행정 분야의 고용 비중이 증가할 경우 OECD국가의 서비스업 업종 구성에 보다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재정지출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 비중이 높아질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제고를 모색할 필요
- OECD대비 한국의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성을 비교 한 결과, 한국이 전체 9개 지표 중 6개에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 됨.
 - OECD국가 대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도소매·숙박업의 고용 지표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4) OECD (2005), Growth in Services: Fostering employment, productivity and innovation,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in 2005

5)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6)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22개 서비스업 중에 수송, 전문직 및 통신 등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장벽지수(해외자본 진입, 인력이동, 공정경쟁제한, 규제투명성 등 분야를 측정하여 0~1의 척도로 표시, 1에 가까울수록 제한적)가 OECD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7) OECD국가들에 비해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R&D활동이 적기 때문임, 표학길 외 (2017), 생산성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한국경제포럼 제 10권 제1호 1-49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9월호 통권 제59호

발행일 2017년 9월 2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